

“오리살려”



8월 26일 오후 1시께 오리 1,000여 마리를 싣고 터미널 방향으로 달리던 화물 차량(1.3t)이 출구를 앞에 두고 급하게 방향을 틀다가 무진대로 상무교에서 전도됐다. 이 사고로 운전자 송모(48)씨 등 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일대에 2시간 동안 차량 혼잡이 빚어졌다. 신속하게 출동한 경찰의 조치 덕에 2차사고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 광주일보 나명주 기자 [2014. 08. 27]

식탐돌 에이핑크 ‘보미’, ‘훈제오리 부추볶음’에 도전

식탐돌 에이핑크 사이에서도 화려한 먹방실력(?)을 자랑했던 보미가 먹방보다 빛나는 수준급 요리 실력을 보여주어 화제다.

MBC에브리원 ‘에이핑크의 쇼타임’에서 방학을 맞이해 서울에 있는 은지를 만나러온 은지동생과의 일일 데이트가 방송됐다.



은지동생이 서울에 오면 무얼 해줄까 고민하던 에이핑크는 맛집에 데려가자고 의견을 제시했으나, 보미는 “그러지 말고 직접 요리를 해주자”며 동생이 좋아한다는 오리고기 요리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오리고기부터 떡볶이까지, 각자의 요리를 정한 에이핑크 멤버들은 “다 같이 요리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다”고 밝히며 대장금의 노래까지 부르며 요리에 열중했다.

특히 멤버들 중에서도 가장 난이도 높은 ‘훈제오리 부추볶음’에 도전한 보미는 능숙하게 재료를 손질하며 수준급 칼솜씨를 선보였다.

오리를 양념하는 손길도 한 두 번한 솜씨가 아닌 듯 능숙한 모습을 보여주며 순식간에 먹음직스러운 비주얼의 요리를 완성시켜 감탄을 이끌었다. 이런 보미의 요리 실력에 은지 동생조차 엄지를 치켜세웠다는 후문.

한편, 일등 신붓감의 모습을 보여준 대장금 보미의 요리 실력은 지난 8월 28일 목요일 오후 6시 ‘에이핑크의 쇼타임’에서 방송됐다.

▶ 국제뉴스 김남지 기자 [2014. 08. 29]

경남·부산·울산지역 집중호우 피해 속출 오리축사도 물에 잠겨 집단 폐사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널 모레가 추석인데...”

농가들에게는 일 년 중 가장 큰 대목인 추석을 코앞에 두고 집중호우로 모든 것을 잃은 피해 농가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고성에서는 농경지 침수와 더불어 마암면 삼락리의 오리 사육장 30여 동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당했다. 4농가가 5만 마리의 오리를 사육 중인 이 마을에서는 인근 임야의 물이 평야지대로 몰리면서 대부분의 오리 사육장이 침수됐다.

1만5000마리의 오리를 치고 있는 이만석씨(52)는 “전체 오리 중 3분의 1이 폐사했으며, 나머지 오리들도 토사와 똥이 범벅이 된 축사에서 뛰쳐나가 인근 농경지에 흩어져 있다”며 “추석에 맞춰 출하를 앞두고 있는 오리들인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다”고 가슴을 쳤다.

8월 25일 폭우는 부산·울산지역 농가와 농경지도 초토화시켰다.

부산에서는 강서구와 기장군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강서구는 벼 20ha, 대파 80ha, 잎채소류 90ha, 화훼 30ha, 과채류 5ha 등 농경지 225ha가 피

해를 봤다. 금정구에서는 축사 1동이 침수돼 오리 500마리가 유실·폐사됐다. 기장군은 벼 90ha, 화훼 10ha, 발작물 20ha 등 모두 125ha가 물에 잠겼다.

한편 경남농협지역본부(본부장 김진국)는 25일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고성군 마암면 삼락리 소재 오리농가들을 위해 26일 직원 50여명을 투입, 신속한 복구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복구 작업에는 지역본부 직원 외에도 NH농협 고성군지부(지부장 권창문) 직원, 동고성농협(조합장 이영갑) 임직원, 고성 관내 공무원·군인 등이 대거 참여했다. 복구에 나선 직원들은 오리 사육장을 뒤덮은 토사들을 긁어내고 새 왕겨를 깔았으며, 사육장이 침수되면서 인근 농경지로 흩어진 오리들을 다시 모아들이는 작업을 펼쳤다.

▶ 농민신문 창원·고성 이승환, 부산·울산 노현숙 기자 [2014. 08. 29]

닭·오리 축사 분뇨배출 관리 강화

적용 대상 가축 및 배출시설 추가 개정 내용

구분	가축		배출시설	
	양	메추리	닭·오리 축사	방목지
현행	양(염소제외)	-	신고대상	-
개정안	양에 염소 추가	메추리 추가	3000㎡ 이상 축사 허가대상	일정 마리수 이상 사육시 신고대상

앞으로 3000㎡ 이상의 닭·오리축사는 허가대상 배출시설로 관리된다. 또한 염소·메추리도 가축 분뇨법상 가축에 추가된다.

환경부는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를 위해 ‘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8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고 8월 28일 밝혔다.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염소를 양에 포함하고, 메추리를 가축으로 추가했다. 또한 돼지 36마리 이상, 소·젓소·말 9마리 이상, 닭·오리 1,500마리 이상, 양 25마리 이상, 사슴 25마리 이상을 방목 사육하는 경우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관리하기로 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와 농산물의 안전과 품질, 환경 개선을 위해 그동안 품질기준이 없던 퇴비·액비의 부숙도·중금속·염분·함수율 기준을 신설했다. 퇴비는 부숙도를 적용하고 함수율이 70% 이하 이어야 한다. 돼지 분뇨 퇴비의 경우 구리는 500mg/kg, 아연은 1200mg/kg 이하의 성분이 검출되어야 한다. 소·젓소 분뇨의 액비는 염분이 2.0% 이하 이어야 한다.

다만 농가의 퇴비화 시설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축사면적이 2,000㎡ 이상 농가에 한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액비의 부숙도는 2017년부터 허가대상, 2019년부터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 축사의 배출시설 규모와 사용중지 일수에 따라 돼지·소·젓소·말은 최대 1억 원까지, 닭·오리·양·사슴 등은 최대 5,000만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선 제도개선 후 규제강화'의 원칙에 따라 한·육우는 축사 이외에 500㎡ 이하로 가축이 운동할 수 있는 장소를 축사 사용대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 운동장에 설치한 불법가설 건축물의 적법화가 가능해졌다.

닭·오리 축사 및 처리시설도 콘크리트, 비닐 바닥 위에 흙을 깔고 발생분뇨를 배출시설에서 처리하

는 경우 처리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불법 신축 또는 증·개축한 배출시설 중 돼지·소·젓소·말 400㎡, 닭·오리 600㎡, 양·사슴·개 100㎡ 미만의 소규모 시설은 2024년 3월 24일까지 사용중지명령의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이 통과되면 가축분뇨 관리 강화에 따라 국민이 체감하는 수질오염과 생활악취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대전일보 한경수 기자 [2014. 08. 29]

축산농 고령화...축산업 미래 불투명

축산분야의 고령화가 촉진되면서 축산농가의 '핵심 생산연령층'이 크게 감소하면서 우리축산업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안상돈 농협경제연구소 축산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최근 '주간 브리프'를 통해 2013년 기준 전체 축산농가 경영주 중 '생산가능 연령층(15세 이상~64세 이하)' 농가 비중이 55.7%, '핵심 생산연령층(25세 이상~49세 이하)' 농가 비중이 1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안 연구위원에 따르면 특히 육계, 산란계, 한우, 오리 4개 축종의 '생산가능 연령층' 농가 비중은 평균 54.0%, '핵심 생산연령층' 농가 비중은 평균 10.2% 수준으로 다른 축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축산 생산기반 위축과 축산관련 산업의 재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

했으며, 닭고기 소비패턴 조사(2013)에 따르면 일 반닭 43.7%, 토종닭 8.4%, 가공식품 32.9% 등 가 구당 연간 97만 3,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닭과 오리고기는 특정 요리에 시장이 집중돼 있어 소비 특성과 경향을 파악해 상품 개발과 시장 개척 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닭·오리고기 소비 촉진에 대한 창작 아이디어를 글로 풀어 누리집 '트 렌드캐치(www.trendcatch.co.kr)'에 응모하면 된다.

공모 주제는 ▷ 닭·오리의 생산, 가공, 유통, 식품 종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품질 개선을 통한 소 비 확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독창적인 아이디어 ▷ 소비 확산을 위한 조리법 ▷ 소비 위축 해소와 사육 농가 보호에 관련된 의견 등이다. 지난해 개 최한 '돼지고기 소비 촉진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에는 제품 개발 134건, 품질 개선 10건, 조리법 26 건 등 모두 173건의 아이디어가 공모됐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송용섭 과 장은 "닭·오리고기 소비 확산을 위한 품질 개선이 나 제품 개발과 관련해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 를 많이 제안해주길 바란다"며 "최우수상 1명에게 는 상장과 상금 200만 원, 우수상 2명은 상장과 상 금 50만 원, 장려상 5명은 상장과 상금 20만 원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 환경일보 차영환 기자 [2014. 09. 04]

**오리협 광주·전남지회,
황주홍 의원과 간담회 가져
오리 산업 전반 현안과 개선사항 전달**

(사)한국오리협회 광주·전남 지회(지회장 마광 하)는 지난 9월 4일, 전남 영암읍 사무소에서 새정 치민주연합 소속 황주홍 국회의원(전남 장흥, 강 진, 영암)과 '오리 사육농가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광주·전남 지회는 오리산업 현안을 설명하고 개선사항을 건의하였다. 이날 주요건의 로 △ 무허가축사 적법화 개선 △ 친환경직불금 개 선 △ LED 교체 지원사업 확대 등을 제시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광주·전남 지회는 오리의 보온덮개형 축사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 포함되어 있으나 지자체에서 주민 민원을 문제 삼 아 신고 및 연장신고를 받아주지 않아 적법화 대상 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무허가 축사 를 기준에 적합하게 개보수하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받아주는 법 지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 견을 전달했다.

친환경직접지불금과 관련해 우리는 육계보다 4.8 배 많은 사육면적과 2.8배 많은 생산비가 투입되 지만 오리 지불금은 마리당 120원에 불과해 60원 인 육계 보다 단순히 2배로 계상하는 것은 형평성 에 맞지 않으므로 이 부문을 전문가에게 연구용역 을 주어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LED 교체사업은 양계농가만 지원하고 있는데 오 리농가에 이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광하 광주·전남 지회장은 "농가에서 AI 방 역소홀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보상금

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항목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방역활동 독려를 위해 인센티브 항목을 대폭 늘려야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방역관리지구 설정은 AI 발생 시 오히려 우리의 입식제한과 규제가 강화될 수 있어 농가의 소득과 계열업체의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규제가 아닌 충분한 시설지원과 이전비용 등 지원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무허가 축사 개선을 위해서는 축사의 허가여부와 관계없이 시설이 열악한 보온덮개형 비닐하우스 축사에 시설 개보수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황주홍 의원은 “오늘 건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무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지역 오리사업 현안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뜻을 밝혔다.

마광하 (사)한국오리협회 광주·전남 지회장은 “오리산업의 현안과 해결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며 “앞으로도 농가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해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대축산뉴스 류필선 기자 [2014. 09. 05]

개그맨 허경환, 오리 시장 뛰어들어... 업계 주목

다이어트 열풍과 맞물려 ‘허닭’ 닭 가슴살로 온라인 시장의 최고 강자 중 하나가 된 개그맨 허경환이 이번에는 ‘허덕’이라는 훈제오리 브랜드를 론



칭하고 오리 시장에 뛰어들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오리 프로젝트는 AI 등 사업 외적 여건으로 오리 수급과 가격이 많이 올라간 부분으로 쉽지 않은 선택이었으나 오히려 이때가 시장 공략을 위한 적기로 판단했다.

시장의 포지션은 1년 내 온라인 판매율 2~3위로 전체 온라인 시장의 판매율 약 15%를 목표로 진행하며 오리업계 누구와도 협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허덕’은 훈제오리 상품을 첫 론칭하며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소셜 사이트 ‘쿠팡’과 함께 훈제오리 최저가 행사를 9월 15일부터 시작하여 가장 낮은 최저가를 확보해 당분간 브랜드가 소비자에 알려지는 시점까지 박리다매 정책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개그맨 허경환이 ‘허닭’으로 프리미엄 닭 가슴살 시장을 확보한 후 4년 만에 론칭한 오리 브랜드 “허덕”은 첫 사업과는 다르게 론칭부터 최저가 카드를 꺼내들게 되면서 탄탄한 기존 업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경쟁에 돌입할 것인지에 대해 오리업계가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 경남도민일보 김종걸 기자 [2014. 09. 15]

진천군의회 시관련 전액 국비지원 건의

진천군의회는 지난 9월 11일 제225회 임시회를 열어 조류인플루엔자(AI)로 살처분된 오리·닭에 대한 보상금의 전액 국비지원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그동안 방역과 살처분 등에 6억 원이 넘는 군비가 투입됐고, 앞으로 50만 마리가 더 살처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11년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의 20%를 지자체단체가 부담한다면 그에 따른 고통이 엄청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의회는 “방역과 살처분 사후 처리에 들어가는 경비만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이 어려울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피해 보상금과 방역 초소 운영비용 등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축산신문 최종인 기자 [2014. 09. 15]

전북도, AI 재발방지 닭오리농가 ‘가축방역’ 교육

전북도는 9월 22일부터 닷새간 조류인플루엔자(AI) 재발방지를 위해 도내 닭오리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방역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전북도가 주관한 순회교육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북도본부 주최로 도내 5개 권역(익산, 김제,

남원, 정읍, 진안)별 지정 장소에서 실시되었다. 이번 가축방역 교육은 지난 1월 16일 전북 고창에서 전국 최초로 발생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의 재발방지를 위해 주요 가축방역정책과 효율적인 AI차단방역 및 소독요령에 대해 중점교육을 했다.

올해 AI 발생은 전국 29건 중 전라북도가 7건으로 고창2, 부안3, 정읍1, 김제1 등이다.

도 관계자는 “10월 이후 북방철새 이동시 철새로 인해 AI 유입가능성이 높은 만큼 농가에서는 주 1회 이상 농가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 줄 것과 닭, 오리농가는 교육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일요신문 [2014. 09. 21]

주남자연농원, ‘의창구 건강밥상 지원사업’에 오리탕 지원

경남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이기태)는 일교차로 원기회복이 필요한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9월 22일 관내 음식점 주남자연농원과 연계해 ‘행복한 의창구 건강밥상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이날 주남자연농원(대표 박덕제)에서 지역 내 저소득노인 30여 명을 위해 준비한 오리탕은 주남자연농원의 특급메뉴로 오리뼈를 넣고 진하게 끓여내 맛이 깊고 담백해 노인들의 기력회복에 최고의 보양식이다.

지난 2012년부터 건강밥상지원사업에 참여중인

박덕제 대표는 “구청과 연계해 지역 내 노인들을 위해 음식으로나마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뜨끈한 오리탕 한 그릇 맛있게 드시고 잘 먹었다는 노인들의 말 한마디에 매번 참여할 때마다 나눔의 기쁨이 배가 된다”고 했다.

▶ 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 기자 [2014. 09. 23]

FTA 최대 피해 축산분야 정부자금 8천 억 추가지원

정부는 한·호, 한·캐FTA 체결로 가장 피해를 보는 산업이 축산분야로 판단,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이미 해오던 사업 지원에다 11개 신규 사업에 약 8천억 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한·미, 한·EU대책에다 이런 규모로 추가 지원하기로 하고, 당장 내년에는 438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농가사료직거래자금,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의 금리를 현 3%에서 2.5%로 인하하며, 도축·가공업체 지원, 가축계열화사업에는 1%의 금리로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액비운송·살포차량도 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착유용 라이너·분만실 깔판·대인 소독기·방역복 등 4종에 대해서도 부가세 사후환급 대상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상속세 감면을 통한 원활한 영농상속 지원을 위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토

록 한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완화하되, 영농상속 공제 한도도 증액과 공제대상 범위 확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은 금년 말에서 오는 2017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연방 3국 FTA 추진에 따른 축산업분야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단기적인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FTA, 피해보전제도(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의 운용기간을 3년 연장(직불 2011~2021년에서 2024년까지 연장하고, 폐업 2011~2016년에서 2019년으로 연장)하고, 피해보전비율도 상향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축산업이 FTA 환경 하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비용절감 및 품질 고급화, 유통구조 개선 및 수급관리 체계화, 성장동력 창출 등 5가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축산물 생산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축비·사료비 등의 절감을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투융자 규모를 당초 1조3천억 원에서 1조5천억 원으로 늘리고, 생축장을 활용한 우량송아지 생산기반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 농가 사료직거래자금 지원도 기존 2조 원에서 2조3천3백억 원으로 늘리고, 쌀겨 등 농식품 부산물의 사료 활용 지원을 위한 부산물유통센터 설치도 매년 2개소씩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생산성 하락의 주요 요인인 가축질병에 대해서는 예방백신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재해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가칭)가축질병공제제도’를 도입, 추진하기로 했다.

수입육과의 차별성 확보를 위해 한우 암소의 유전 능력 향상 및 개량정보 통합제공, 돼지 종축에 대한 국가단위 유전능력 평가체계 구축 등 우량종축의 생산·공급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우 품질고급화 기술 개발을 위한 ‘(가칭)한우특성화사업단’을 운영하며,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해 한우에 이어 돼지에 대해서 이력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도축·가공·판매 일관체제 구축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한우에 대해서는 농협 경제사업활성화자금을 통해 농가·지역·축협·농협중앙회간 계열화 체제를 구축하고, 양돈은 역량있는 3개소 내외의 품목조합에 대해 도축·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조기 정착을 위해 표준매뉴얼을 개발하고, 경영 컨설팅을 신규 지원하는 한편 축산물 수출기반 구축을 위해 수출업체에 대해 원료구매자금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 축산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자원화 및 에너지화 시설을 확대하고, 약취기준 설정 및 적정 관리지침도 마련해 약취저감시설에도 내년부터 지원키로 했다.

이외에 민간전문가 중심의 효율적 분뇨·약취 관리를 위해 내년에 축산환경관리원을 설립하고, 친환경 축산 직불금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 축산신문 김명란 기자 [2014. 09. 19]

**전통시장 내 식육판매업 영업자,
일정 시설 갖추면 포장유통 안 해도 돼**

전통시장 내에서 식육판매업과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하는 경우 일정 시설 등을 갖추면 포장해 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재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통 시장 내에서 -2~5℃를 유지하며 외부 오염을 막을 수 있는 진열시설을 갖추고 표지판 등에 표시를 한 경우에 가능토록 했다. 포장 없이 진열장에서 닭, 오리 식육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내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얼음을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필요 요건으로 시설 및 판매방법을 갖추면 포장 판매하지 않아도 된다. 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043-719-3204, 팩스 043-719-3200)로 제출하면 된다.

▶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2014. 09. 17]

**생닭·오리 개별포장 판매
시시비비 논란**

생닭과 오리를 개별 포장해 판매하는 규정을 두고 상인과 소비자 간 논란이 뜨겁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포장비용에 따른 가격 상승, 쓰레기 배출 등의 문제를 들며 규제 완화를 요구 중이지만 소비자들은 위생상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1일부터 상인들이 생닭과 오리를 날개로 판매할 경우 반드시 포장해 판매하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상당수 시장 상인들은 벌금을 내더라도 포장을 하지 않은 채 판매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대전지역 한 시장의 경우 지난 7월 축산물을 취급하는 점포 8곳이 개별 포장 없이 판매하다 적발돼 벌금 처분을 받았지만 기존 판매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해당 상인들은 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포장 판매는 시장 특성과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장 판매는 매출에도 영향을 끼친다. 개별 포장 시 마리당 500~6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닭과 오리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져 대형마트와의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게 된다. 매출 감소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위생 문제도 각 점포마다 냉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다 2~3일이 지난 것은 전부 폐기처분하기 때문에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상인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생닭·오리 개별 포장 판매에 대해 소비자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주부교실, 소비자연맹 등으로 구성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최근 시장 상인들이 가금육 개별포장 규정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은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소비자단체는 포장 없이 판매될 경우 유통기한 확인이 어려워지고, 수입산 닭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 원산지 위반 행위도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일부 소비자들은 시장에서 포장되지 않은 닭과 오리를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원하는 부위를 손질해 줘 편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시장을 찾은 한 주부는 “포장이 안 된 생닭은 대형

마트에 비해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며 “단골이러 군이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않고도 믿고 사는 편”이라고 말했다.

▶ 충청투데이 원승일 기자 [2014. 09. 25]

전남 영암 AI 확진, 오리 3만 4,000마리 살처분... 반경 10km 이동제한 조치

지난 9월 24일 전남 영암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가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6일 “전남 영암 육용오리 농장에서 폐사, 신경증상 등 AI 의심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돼 정밀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살처분과 이동제한 조치 등을 통해 추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남 영암 AI 확진으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영암군은 해당 농장 육용오리를 모두 살처분했으며 해당 농장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오리 3만 4,000마리도 모두 살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농장 반경 10km에는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 헤럴드POP [2014. 09. 27]